

보훈선양 정책측면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연구

李 基 五*

1. 서 론
2. 보훈선양정책의 이론적 고찰
3. 외국의 유해발굴사업 사례 분석
4.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추진경과 및 의의
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정책방향
6. 결 론

1. 서 론

人類의 歷史는 곧 戰爭의 歷史다. 古代로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戰爭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발했다. 戰爭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戰爭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그리고 사회적 파괴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戰爭은 國家를 지키기 위한 軍隊와 軍人의 존재가치를 깨닫게 하기도 하였다.

* 육군 중령, 방위사업청

軍隊와 軍人은 평시에는 戰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犧牲에 대한 報償으로 國家報勳¹⁾은 國家의 존립과 더불어 형성되어 발전해 온 제도로서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지만, 國家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통하여 국가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인 國家의 기능이다.

古代로부터 많은 國家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戰死者에 대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었다. 古代 그리스는 3일간의 국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로마 제국은 戰死者 유해송환을 위한 노력을, 베네치아 공화국은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평생 생계 보장을 국가가 책임졌다. 우리나라도 壬辰倭亂 당시 戰死者는 반드시 고향으로 봉송, 정중한 장례를 치르도록 했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구휼법을 통해 생계를 지원했다. 美國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전사상지는 반드시 데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60여 년 전 이 땅에서 6·25전쟁을 겪으면서 전사한 호국용사 27,000여 명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였으나 아직도 13만여 명에 달하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2000년부터 시작된 戰死者 遺骸²⁾發掘事業을 통해서 약 3,000여 명의 유해를 발굴하여 국립현충원에

1)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서울: 일진사, 2005), p. 21 참조. 국가를 위한 공헌(貢獻, contribution) 또는 공훈(功勳, national merits)으로 간주할 수 있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는 유·무형의 물질적, 정신적 보답 행위로 정리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성원이 행한 국가를 위한 공헌, 즉 공훈에 대한 보답 행위를 의미한다.

2)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전사자 유해"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전투(이하 6·25전투라 한다)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인정하는 전몰군경 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전투중사군무원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순직한 자의 유골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말한다.

불안하였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의 目的은 6·25戰爭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계승하고 참전용사의 名譽宣揚 및 戰死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상기하는 데 있다. 또한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경의를 표시하고,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며 참전국과의 유대강화 및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戰死者 유해발굴사업은 주권국가로서 전후 처리를 통해 참전한 모든 사람에게 국가적 차원³⁾에서 위로와 감사를 보내고 필요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50년이 지난 후에야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국가적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研究는 먼저 報勳宣揚政策의 이론적 측면의 고찰과 외국의 유해발굴사업의 사례분석 후, 우리나라의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의 推進經過와 意義를 알아본 후, 國家報勳과 報勳宣揚政策 측면에서 향후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의 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훈선양정책의 이론적 고찰

(1) 보훈선양의 개념과 정책유형

1) 보훈의 개념

報勳은 국가와 국민 개인(또는 집단)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3)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 제3조(전사자유해발굴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나라를 위해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 유가족을 찾아주고,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일은 국가 무한 책임의 숭고한 책무이므로 국가는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행위이다.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지만 ‘고맙게 해준 데에 대한 갚음’을 뜻하는 보수(報酬)의 보(報)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를 뜻하는 공훈(功勳)의 훈(勳)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개념이다.⁴⁾

報勳은 국가를 위한 공헌(貢獻, contribution) 또는 공훈(功勳, national merits)으로 간주할 수 있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는 유·무형의 물질적, 정신적 보답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報勳은 공동체의 성원이 행한 국가를 위한 공헌, 즉 공훈에 대한 보답 행위를 의미한다.⁵⁾ 공헌의 주체는 국민이고 객체는 국가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훈의 주체는 국가이고 객체는 국민이 된다.

報勳은 “보상을 통해 교훈을 새기는 것이다.”⁶⁾ 國家報勳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 특수한 보상을 통해 교훈을 새기고, 그 은공을 갚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훈은 ‘특별한 보상’의 형태로서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데 있다.

報勳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대상과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報勳의 概念을 정의하면 “報勳은 국가가 공동체의 존립·유지·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하여 보답하는 행위로서 그 공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현창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명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 報勳의 내용에는 보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정과 기억 그리고 명예존중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전신욱, 「한국 보훈문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가보훈연구』(서울: 한국보훈학회, 2003. 5), p. 123.

5)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서울: 일진사, 2005), p. 21.

6) 정숙경, 「국가보훈의식과 보훈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문가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호국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훈학회 2007년도 춘계세미나(서울: 한국보훈학회, 2007. 6), pp. 9-10.

2) 보훈선양의 개념

報勳宣揚은 “國家에 대해 헌신과 희생을 하게 하였던 기본정신을 기림으로써 그 정신과 뜻, 유지(有志)를 받드는 것”으로,⁷⁾ 國家報勳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정신과 취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앞으로도 國家에 대해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報勳宣揚은 國家를 위한 헌신이 명예롭고 존경받으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愛國精神을 함양하여 보훈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보훈문화는 國家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보답하려는 보훈의식과 國家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愛國精神이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報勳宣揚은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간직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國家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길러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심을 배양하는 기능이다. 상징적 정책으로서의 선양정책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와 民族의 차원에서는 愛國愛族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政治體制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다.

둘째, 政治體制의 차원에서 自由主義 및 資本主義의 政治體制와 經濟體制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

셋째, 政治體制 담당자와 정권담당자의 차원에서 執權勢力의 支持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報勳 關係 法律에 규정되어 있는 報勳의 目的과 理念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이를 통해 그 概念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먼저 報勳의 目的에 나타난 報勳宣揚의 概念이다. 報勳 關係 法律을 보면, 國家報勳基本法 제1조에 國家報勳은 “國家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7) 정숙경, 「국가보훈의식과 보훈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문가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호국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훈학회 2007년도 춘계세미나(서울: 한국보훈학회, 2007. 6), p. 14.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중략) 나아가 國民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에우법’이라고 한다) 제1조에 “日帝로부터 祖國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공헌한 獨立有功者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중략)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하여 報勳을 선양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에우법’이라고 한다) 제1조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중략) 軍人과 경찰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중략) 國民의 애국정신 함양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報勳의 目的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報勳宣揚의 概念을 정리해 보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여 國民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報勳의 理念을 통해 본 報勳宣揚의 概念이다. 國家報勳基本法 제2조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중략)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적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독립유공자에우법 제2조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한 우리 大韓民國은 (중략) 獨立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라고 명기되어 있다. 국가유공자에우법 제2조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중략)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라고 되어 있다.

위의 報勳의 理念에서 나타난 報勳宣揚의 概念을 정리해 보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報勳 關係 法律에 명시된 報勳目的과 報勳理念에 나타난 報勳宣揚의 概念을 보면, 報勳目的보다는 報勳理念에서 報勳宣揚의 概念을 확장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概念을 종합하여 보면, 報勳宣揚이란 “國家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獨立有功者와 國家有功者의 숭고한 정신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고 애국심을 함양하여 國民統合과 國家發展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단순히 國家有功者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國民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영원히 존중되도록 하며, 그분들의 정신을 國民의 愛國心으로 승화시켜 國民統合과 國家發展에 기여한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概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 보훈선양정책의 유형

政策의 類型은 기존의 研究에서는 정책의 역할, 정치체제의 산출, 그리고 제공되는 편의 등을 기준으로 분류⁸⁾하고 있으나 연구목적상 소관부처인 國家報勳處에서 추진하고 있는 報勳宣揚政策의 유형을 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政府記念行事, 報勳宣揚 프로그램, 功勳宣揚事業 등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政府記念行事는 政府가 전 國民들을 대상으로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기념행사로서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현충일, 6·25전쟁일, 4·19 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법정기념일이 있다.

이들 政府記念行事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앙기념식의 경우 3·1절과 光復節 기념식은 행정자치부가, 기타 중앙기념식은 國家報勳處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기념식의 경우 지방보훈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報勳團體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報勳宣揚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國家有功者

8)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서울: 일진사, 2005), p. 325. 정책의 역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실질적 정책과 절차적 정책으로 분류되며(C. O. Jones), 정치체제의 산출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되며(T. J. Lowi, G. A. Almond & G. B. Powell Jr), 제공되는 편의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물질적 정책과 상징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 愛國心을 선양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방보훈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교육문화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캠프와 보훈문화교실, 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며, 地域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현행사 등이 있다. 이들 行事主體는 매우 다양하나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지방보훈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가, 문화·재현행사는 지역 문화단체 또는 관련 기념사업회가 대부분이다.

셋째, 功勳宣揚事業은 國家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공적을 발굴선양하기 위해 報勳行政機關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獨立有功者 발굴포상, 독립유공자 개별공적관련 국내·외 사료 수집, 국외애국선열유해봉환, 독립유공자 및 國家有功者를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의 관리 등이 있다.

獨立有功者 발굴포상과 국내·외 사료수집은 報勳行政機關과 관련 전문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관리는 지방보훈행정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념사업회 등이 하고 있다. 報勳宣揚政策은 政府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國民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고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報勳宣揚政策은 종전에는 政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단체는 보조하는 식으로 민간단체의 참여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國民들의 報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민간단체의 참여도 확대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세이다.

4) 보훈선양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報勳宣揚政策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報勳

宣揚관련 기념행사, 기념 시설물 건립, 기타 등을 들 수 있겠다. 본 研究에 서는 기념행사, 기념시설물 건립, 기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記念行事는 報勳宣揚事業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각종 기념일과 추모행사 등을 시행함으로써⁹⁾ 國家를 위하여 헌신, 희생한 순국

<표 1> 우리나라 보훈선양정책¹⁰⁾

핵심 가치	대표적 보훈선양정책		
	기념 행사	기념 시설물	대국민교육/ 학문적 연구지원
보훈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념일 - 광복절 - 3·1절 - 임정수립기념일 - 순국선열의 날 - 현충일 - 4·19혁명 기념일 -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 재향군인의 날 • 정부기념주간 (호국·보훈의 달) • 민간단체 기념행사 - 각종 독립운동 참전,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 추모제, 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관리 기념물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립묘지(6) • 자치단체, 민간단체 관리 기념물 - 애국선열 개별 기념관(공원) - 전적지, 전투지 기념관 - 4·19기념도서관 - 5·18기념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 서훈 • 공훈록 편찬 • 명명사업 • 사료수집·편찬 • 유해발굴·봉환 • 사적지 순방교육 • 보훈 연수교육 • 국제 보훈활동

9) 유영옥, 『국가보훈학』(서울: 홍익재, 2005), pp. 764-765 참조. 국민적 홍보사업으로 2·8 독립선언 기념식 등의 독립행사, 순국선열 추모제전 등의 추모행사, 안중근 의사 의거 기념식 등의 개인별 기념행사, 3·1독립운동 기념식, 4·19혁명 기념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6월 6일 현충일의 범국민적인 추모행사, 196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6월의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이 있다.

10)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서울: 일진사, 2005), p. 325.

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愛國精神을 고취시키고 報勳을 함양시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각종 記念行事¹¹⁾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동시에 기존의 記念行事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記念行事와 記念日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記念施設物은 報勳을 드러내어 널리 떨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4·19국립묘지, 전적기념물¹²⁾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報勳宣揚施設은 우리 조상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 시설들로서 호국선열들의 혼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 장소이다. 遺骸奉安은 일제치하에 국권을 회복하고자 중국, 러시아, 일본, 미주 지역에서 獨立運動을 하신 애국선열 중 조국광복 후에도 환국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해를 조사하여 국내에 유해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위훈을 기리고 숭고한 愛國精神을 후세에 계승하여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추진하고 있다.¹³⁾

셋째, 대국민 교육 및 학문적 연구 지원사업으로는 國民이 올바른 報勳

11) 전신옥, 『한국 보훈문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가보훈연구』(서울: 한국보훈학회, 2003. 5), pp. 136-138 참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의 하나인 보훈행사로 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4월 13일), 4·19혁명 기념행사(4월 19일), 현충일 추념식(6월 6일),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6·25기념행사(6월 25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11월 17일) 등 계기행사의 개최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전적기념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장에서 산화한 호국영령의 살신보국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제작, 건립된 각종 건조물 및 조형물을 말한다. 전적기념 물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로 기념관, 기념탑, 기념비, 동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 각지에 건립된 현충탑과 위령비는 명칭상 또는 형태상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13) 유영옥, 『국가보훈학』(서울: 홍익재, 2005), p. 766 참조. 해외선열 유해봉안 실적으로는 1963년까지 일본, 중국, 네덜란드에서 6명, 1970년대 미국, 일본에서 3명, 1980년대 일본 1명, 중국 1명, 1990년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일본에서 56명, 2000~2003년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23명 등 7개국에서 총 90명의 유해봉환을 하였다.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獨立運動 사적지 순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國家報勳處에서는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國民精神教育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자료집과 문헌 등 간행물¹⁴⁾을 발간하여 국민에게 보급함으로써 報勳 함양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간행물은 민족의 자존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배부되어 국민에게 報勳을 선양시키고 있다.¹⁵⁾

3. 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사례 분석

(1) 미국의 유해발굴사업

美國의 경우 국방부에 부차관보급의 책임자를 둔 '전쟁포로 및 실종자 담당처'가 설치돼 있고 그 아래 실무팀으로서 우리에게 '실하이(CILHI)'¹⁶⁾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美 육군 중앙신원확인소가 있다.

14) 전사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간행물은 명부, 공훈록, 유고집, 참전수기와 회고록, 전투기록과 전쟁사, 전쟁문학집 등이다. 첫째, 명부는 전쟁기념관의 『전사자명부』, 국가보훈처의 『참전용사인명록』 등이다. 둘째, 공훈록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공훈록』, 국방군사연구소의 『호국전몰 용사공훈론』 등이다. 셋째, 전투기록과 전쟁사: 육군본부의 6·25사변 『육군전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 『파월한국군전사』 등이다. 넷째, 개인 유고집, 전쟁문학집(국군홍보관리소의 『호국문예』, 한국전쟁 문학회의 『전쟁문학』) 등이다.

15) 유영옥, 『국가보훈학』(서울: 흥익재, 2005), p. 768 참조. 독립운동 수집자료 번역 및 해제비 관련 예산으로 2001년 201만원, 2002년 506만원, 2003년 2,500만원, 2004년 2,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16) CILHI(US Army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in Hawaii : 미 육군 중앙신원확인소)의 전신은 1973년 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미 육군 태국 중앙유해감식소(CLI-Thai)다. 같은 해 태국에서 하와이로 옮겨오면서 명칭이 미 육군 중앙신원확인소로 바뀌었다.

美國은 2003년 10월 1일자로 실하이의 명칭을 '미국 국방부 합동전쟁포로·실종자 담당사령부(JPAC)'로 바꾸고 최고 지휘관을 소장 진급 예정인 준장으로 승격하는 등 그 지위를 대폭 격상시켰다.

사령부의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들을 유해발굴·감식·송환 등의 순서를 거쳐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 2003년 7월까지 모두 738구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에 안기게 했으며, 특히 한국군으로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故(고) 박우식 대령의 신원을 35년 만에 확인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총 420여 명으로 구성된 사령부는 현재 주요 5개 분야, 즉 분석·협상·조사·발굴·신원확인 등으로 팀을 구성, 업무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분석팀은 발굴 장소 등을 결정할 자료로 활용될 전쟁 당시 역사와 정보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실종자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와 병행해 역사전문가와 아마추어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등 가능한 한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획득한다. 또한 여기에 유가족들로부터 실종자의 의학·치과기록을 세세히 파악하고 기록에 남긴다.

둘째, 해당지역 발굴을 위해 협상팀이 해당 나라와 조차사항을 조율한다. 해당나라들의 정치·군사·사회상황 등 모든 것들을 세세히 파악,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편익한 방법으로 발굴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협상팀의 주 임무이다. 지금까지 협상을 벌인 나라는 러시아·中國·北韓 등 10개국 이 넘고 있으며, 北韓 지역의 경우 사령부 요원의 입국과 발굴을 허용한 1996년 이후 100여 구의 신원을 확인해 이 중 미군 13구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여 가족 품에 돌려줬다.

셋째, 조사팀은 발굴팀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강은 있는지, 절벽은 어느 정도인지 각종 장애물들을 면밀히 관찰한다. 이를 위해 조사팀들은 정글을 다니기도 하며 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가기도 하고 강 속으로 잠수하

기도 한다.

넷째,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개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발굴팀은 해당지역으로 신속히 이동, 흙을 세밀한 뜯개로 고르는 등 단서가 될만한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 같은 세심한 관심 외에도 전문가와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GPS 등 첨단방법이 동원된다.

다섯째, 확인팀은 발굴팀이 가져 온 조각난 뼈와 흔적물을 토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애써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과학적 방법이 동원된다. DNA 분석 등 가능한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원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전장에서 실종된 美軍은 제2차 세계대전 때 7만 8,000명, 베트남 전쟁 때 1,800여 명 등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전쟁 중 실종된 미군을 비롯해 비행기 추락으로 바다에 수장되거나 신원확인 없이 美國 국립묘지에 묻힌 경우도 있다. 실제 사령부는 英國과 파푸아뉴기니 근해에 잠수부가 포함된 발굴단을 파견, 수중에 있는 유해를 건져내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티베트, 라오스, 중국, 북한 등에서 계속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You are not forgotten(우리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을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JPAC¹⁷⁾은 단 한 구의 유해라도 언제 어디서 사망했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찾아낸다. 1985년 북한과도 협상을 시작해 그동안 유해 200구 이상을 발굴했으며 그 대가로 北韓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美國에선 발굴된 유해를 마치 살아 있는 유명 인사를 모시듯 정중하고 엄숙하게 봉송한다. 유해가 도착하는 공항에는 지역 출신 상·하의원,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따뜻하게 영접한다. TV와 라디오 등 언론은 수십 년 만에 고국과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영웅'들을 생중계한다. 때

로는 대통령까지 공항에 나가 성조기에 둘러싸인 관에 헌화하면서 경례하는 모습을 담은 외신 뉴스를 접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2) 일본의 유골수집 활동

日本의 유골수집 활동은 1952년 국회에서 해외 등의 유골수집 실시안이 가결되면서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제1차 계획에 따라 유골수집이 실시되었다. 이어 1953년도에는 무명 전몰자 묘원(千鳥ヶ淵戰歿者墓苑)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日本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후반기에 해외 등의 전장에서 전몰자 및 전·병사한 자를 그 현장에 가매장 처리하였다. 종전과 함께 전몰자의 유골수집사업은 원호행정의 중심사업이 되었고, 그에 대한 사업성과도 대단히 컸다.

日本은 1959년 정부 유골수집단에 의해서 수집된 신원미상의 유골들을 안치했다. 1963년에는 전몰자 추도식을 국가행사로 거행해야 한다는 국회와 유족으로부터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각의결정이 있었고, 2년 후 1965년부터는 후생성에서 매년 이 묘원의 배례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59년부터는 구소련방의 승인을 얻은 지역에 대해서 시베리아묘지 참배를 실시해 오고 있다.

1967년부터는 6개년 계획하에 유골수집 제2차 계획이 수립되어 항공기 등을 이용한 해외유골 수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3) 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시사점

외국의 경우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일부 단체나 해당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국한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17) JPAC(The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은 2003년 10월에 임무와 규모를 새롭게 해 사령부로 격상 개정되면서 지휘관의 계급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격상됐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보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美國과 日本은 자국민의 유해송환과 관련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고귀하게 여기고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국민의 희생을 드높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의 시사점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 사업은 우선 국가에서 참전 장병들을 끝까지 찾아내 그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주권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전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도리를 늦게나마 다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모든 국민,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안목에서 이러한 사업은 애국·보훈정신을 함양시켜 차후 있을지 모를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을 갖게 될 것이다.

4.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추진경과 및 의의

(1)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추진경과

2000년 4월, 6·25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작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03년 7월, 사업 지속 추진이 결정된 후 사업전담부서를 편성, '05년 6월, 국가연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07년 1월에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돼 大統領令 제19479호('06년 5월), 國防部 직할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에 사상자는 300여만 명으로 10년이라는 戰爭 기간에 200여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베트남전과 비교해도 5배가 넘는 기록이다.

6·25戰爭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그 중 민간인을 제외한 아군 병력의 인적 피해는 총 59만 8,813명. 이 가운데 사망 13만 5,858명, 실종 1만 9,321명, 부상 44만 3,634명으로 집계돼 있다.¹⁸⁾

遺骸發掘事業은 이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 산하 곳곳에 잠들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0년 공식적으로 6·25戰爭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전개하기 이전에도 遺骸發掘作業은 있어 왔다. 전후 사단별로 전사의 기록을 토대로 퇴로와 진격로를 가늠해 유해를 수습하기도 했고, 진지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遺骸發掘事業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戰死者 遺骸發掘은 전쟁발발에서부터 휴전 직전까지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앞으로는 비무장지대(DMZ)와 북한 16개 지역, 베트남전 전몰자에 대한 遺骸發掘事業도 추진할 계획이다.¹⁹⁾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4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1단계는 발굴준비. 6·25 전투전사 및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증언 및 제보를 접수받아 기록을 분석하고 증언내용을 기초로 현장실사를 하는 것이다.

둘째, 2단계는 遺骸發掘 및 수습. 지형 및 토질 분석을 통해 굴토지역을 결정하고 문화재 발굴기법을 적용, 정밀발굴하고 기록하는 단계이다. 이때 정성과 예를 다하여 발굴, 수습하며 지역단위의 영결식을 거행한다.

18) 김원권, 『한국전쟁피해 통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6.

19) 『국방저널』, 국방부, 2004년 6월호 참조. 영구추진사업으로 다시 재개된 유해발굴사업은 일단 2020년까지 크게 3단계로 계획되고 있다. 1단계(2004~2009년)는 남한지역에서 유해발굴을 마치고, 2단계(2010~2015년)는 비무장지대에서, 3단계(2015~2020년)는 북한지역에서의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3단계는 감식 및 신원확인. 유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아를 구분하고 유해의 신체적 특징을 정밀분석, DNA검사를 실시해 유해 및 戰死者를 찾고자 하는 유가족과 유전자를 비교분석한다.

넷째, 4단계는 국립현충원 안장 및 봉안. 國軍 戰死者의 경우 신원확인된 유해는 화장 후 국립현충원(대전) 묘역에 안장하고 미확인 유해는 화장 후 국립현충원(서울) 납골당에 임시 봉안한다. 기타 우방군 유해는 해당국에 인계하고 적군 유해는 인수의사를 타진해 미인수 시 적군묘역에 임시 매장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2008년까지 발굴한 유해는 <표 2>와 같이 총 2,855구이다.

그러나 遺骸發掘事業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다. 戰死者 매장 관련 자료가 제한돼 있어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6·25세대의 고령화로 유해소재 관련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

<표 2> 유해발굴사업 총괄 현황²⁰⁾

연도별	유 해			유 품
	계	완 전	부 분	
2000	344구	125구	219구	9,380점
2001	211구	86구	125구	9,943점
2002	226구	69구	157구	7,639점
2003	152구	112구	40구	4,942점
2004	173구	56구	117구	4,984점
2005	203구	85구	118구	3,085점
2006	175구	22구	153구	2,599점
2007	534구	447구	87구	7,577점
2008	837구	141구	696구	12,480점
계	2,855구	1,143구	1,712구	62,629점

2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09. 3. 31 참조.

때문이다. 급격한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와 전투현장의 훼손, 각종 공사, 개간, 조림사업, 홍보부족에 따른 제보 및 유가족 체혈의 참여 저조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다. 향후 3~5년간의 노력 정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여진다.

國防部 유해발굴감식단은 遺骸發掘事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²¹⁾을 제정,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여 관련부서 및 지자체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유해 임의처리나 훼손 시 처벌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 체혈 참여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유해감식 및 DNA 검사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고, 민간 전문인력 채용 및 군 자체 인력 양성, 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 자료 DB 구축, 유해소재 종합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의

6·25戰爭 戰死者 遺骸發掘은 戰死者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그로써 국민의 일원이었던 參戰軍人에 대한 國家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의 意義는 아래와 같다.

첫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그동안 소홀했던 전사자들에 대해 國家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國民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5戰爭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통한 ‘國家無限 責任 意志 實踐’을 천명하였다.²²⁾ 韓國戰爭 중의 韓國軍 戰死者는 大韓民國의 안

21) 대통령령 제19479호, 2007. 1. 1.

22) 2008년 6월 현충일 이명박 대통령 추념사, “...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홀로 남겨진 13만여 명의 6·25전사자들의 유해가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 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

보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이다. 韓國戰爭 발발 이후 반세기가 지나 미발굴된 이들 護國의 戰死者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개시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國家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미가 큰 것이다.

둘째, 韓國社會 내부의 民軍關係에 있어서 國家安保 측면에서의 社會統合(social integration)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역사적으로 國家의 출현 이후 구성원인 國民에게 부과된 국방의 의무는 전세계적인 공통현상이 되었다. 國家는 國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그러한 國家의 구성원인 國民은 외부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國家를 수호하기 위하여 징병에 응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戰爭 발생 시에는 전투원 등으로 참전하여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家와 國民의 기능과 역할이 결합되는 데에서 國家 내부의 사회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國家는 國家를 위하여 헌신한 國民에 대하여는 그러한 國家有功자가 살아있을 때나 사망한 이후까지도 영원히 그의 名譽를 현양하고 國家가 보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國家安保 측면에서의 民軍 간의 社會統合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은 美國의 경우를 통하여 좋은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美國社會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와는 달리 여러 인종·민족과 종교의 분포를 가진 복합사회의 중층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美國민은 성조기 아래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강한 사회통합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美國의 국가적 보상의 제도화이다.

美國은 韓國戰爭 기간 중 北韓地域에서 전사한 美軍의 遺骸發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北韓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50년 전의

美軍 戰死者 유해를 발굴하여 그들의 국가적 공로와 명예를 현양하고 보상하려는 정책을 펼쳐 보이고 있다.²³⁾ 생존 시와 사망 이후를 불문하고 국가 유공자를 끝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고 현양하려는 美國의 國家政策이 복합사회임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民軍關係를 國家安保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南北韓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지향의 계기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인도적 체제인 北韓에 대하여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0년도 戰死者 遺骸發掘事業 이후 적군 유해는 北韓軍 384구, 中共軍 177구를 발굴하여 매년 군사정전위를 통해 유해송환 의사를 타진하지만, 北韓과 中國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²⁴⁾

넷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國民들의 왜곡된 대미관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美國이 6·25전쟁 당시 130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이 중 3만 3천여 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일반국민들은 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통해서 美國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재인식할 수 있다.

또한, 參戰 友邦國家의 戰死者 유해를 발굴하여 인도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國際社會에서 韓國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평화 지향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國家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戰爭史 및 考古學 분야에서 새로운 學術研究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매년 戰死者의 넋을 기리면서도 막상 遺骸發掘事業이 戰爭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시작된 데에는 軍人을 고귀한 國民의 일원으로서보다 하나의 戰爭 자원으로만 파악하는 인권 경시의

23) 『주간 북한동향』 제613호,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2. 10월호, 28쪽. 2002년 10월 12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북한 내에서의 미군 유해 공동발굴 작업과 관련하여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모두 378구의 미군 유골을 미국 측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24) 조선일보 2008. 6. 23일. 이 가운데 북한군 352구, 중공군 84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인도적 차원에서 매장되었다.

고 받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 ….”

풍조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낙후성은 韓國戰爭史 연구 자체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으나 이제 遺骸發掘事業을 통해 戰爭事(war history) 연구를 戰鬥過程만을 나열하는 戰鬥事(combat history)와 戰爭의 政治史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戰死者 遺骸發掘 과정에서 戰死者들의 연령과 신장 등에 대한 형질 인류학적 특징 파악과 함께 발굴된 개인 유품²⁵⁾을 통해 당시 생활을 추정 복원함으로써 60년 전 당시의 인류학적 조사가 가능하여 戰死者 遺骸發掘에 관한 이론과 연구 방법 등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정책방향

오늘날 國家安保를 위한 교육의 부재 속에서 遺骸發掘事業은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安保教育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의는 크다. 그러므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國家 차원의 전후처리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國家를 위해 忠誠하다 희생된 사람을 國家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國家에 대한 신뢰와 조국애를 느끼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첫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政府次元의 報勳宣揚政策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國家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에 대해 國家와 國民이 쏟는 관심과 애정은 國民들에게 國家와 社會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한 목숨 희생할 수 있다는

25) 『6·25전사자 유해발굴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육군유해발굴단 편, 2001, p. 277 참조.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우리는 전사한 군인들의 다양한 유품들을 접하게 된다. 이름이 새겨진 빨도장과 예수상, 천주교 기념메달, '중(中)'자 단추, 손거울 속에 들어있는 희미한 남녀의 증명사진, 지폐, 삼각자 등이 발굴되었다.

깊은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美軍 유해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CILHI의 모토나 코소보 사태에 파견되어 유고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미군포로가 美國땅을 밟으면서 '祖國이 명하면 나는 다시 코소보로 가겠다'라고 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²⁶⁾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가치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6·25戰爭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고 극복하며 6·25戰爭을 경험한 세대와 전후세대 사이의 역사인식 단절을 회복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정통성 및 통시성을 갖고 있다. 헌신한 참전용사의 높은 희생정신을 기리며 자긍심 고취를 통한 國家의 무한책임 의지를 표명해서 전후세대의 國家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⁷⁾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遺骸發掘 사진 및 유품을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를 보더라도, 매년 9월 3번째 금요일을 '戰爭 포로 및 실종자 추념일(POW/MIA DAY-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Day)'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둘째, 관련예산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美國의 경우는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전사한 美軍 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데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연간 1천4백억 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사업의 유래가 6·25戰爭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기에 기념사업의 전체예산 190억 중 일부만이 遺骸發掘事業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셋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범국민적 안장행사로 전개하고, 유해발굴현장 공원화 및 기념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安葬行使는 현역, 참전군인을 포함한 예비역, 정부 및 각계 인사들이 참

26) 변홍진, 「미국의 실종미군 찾기 반세기」, 신동아, 2000년 8월호.

27)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전사자 유해발굴』 제3집, 육군본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0, pp. 387-390 참조.

석한 가운데 장엄하게 치르고, 또 널리 國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가깝게는 參戰勇士에 대한 위로와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넓고 긴 안목에서 보면 國民들의 安保意識을 고양함은 물론 愛國心을 함양하고 또 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祖國을 지키다 산화한 용사들의 넋을 위로해야 하며, 遺骸發掘의 안보 교육적 효과와 사업의 의미를 보다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대대손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역별로 수습한 유해는 사단별로 영결식을 갖고 화장한 뒤 1년에 두 차례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된다.²⁸⁾

넷째, 다양한 戰死者 報勳宣揚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표 3>과 같이 外國의 다양한 주요 군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韓國의 戰爭記念館에도 적용하여야 하고, '보훈문화유산 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해설사'²⁹⁾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戰死者 遺骸發掘 관련 시설의 특성에 맞는 해설사를 양성하여 유급 또는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戰死者 遺骸發掘 관련 시설이 소개한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홍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요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확대해 遺骸發掘事業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護國·報勳의식의 확산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추가적으로 관람을 통해 느끼고 다짐한 사항들을 소감문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 홍보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8) 신원확인이 된 경우는 안장이고,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안치이다.
 29) '문화유산해설사'란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해당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봉사자를 말한다. 문화유산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도록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학제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보훈문화유산 해설사'는 현충관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학·교육학 전공을 하는 대학생 또는 이에 상응한 주민들 중에서 일정교육을 수료한 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표 3> 주요 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³⁰⁾

구분	한 국 전쟁기념관	미 국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	영 국 전쟁기념관	호 주 전쟁기념관	캐나다 전쟁박물관	독 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	중 국 인민혁명 박물관
소재지	한 국 (서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영 국 (런던)	호 주 (캔버라)	캐나다 (오타와)	독 일 (드레스덴)	중 국 (베이징)
교육 프로 그램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글짓 기 공모, 기념관관람 감상문, 청소년· 교사 대상 호국문화 교실	군사사 교육 프로그램, 제2차 세계 대전사·참전 용사에 의한 현재·미래 세대, 역사기, 군사담당, 학생들 교육	전쟁사, 전격전 체험교육, 주택변천사, 제2차 세계 대전, 참호 체험학습, 대학살 체험 학습	초·중학생: 주인의식, 가정의 발전, 제2차 대전 당시 공군의 역할 중·고교생: 1,2차 대전, 호주 방어 기술혁명 고등학생: 호주·뉴질 랜드군 전쟁 과 시 역사자료	박물관 자료 대여, 교실 수업 교사, 교육 프로그램: 전시품, 디오라마, 비디오, 복식, 화기, 시, 그림, 음악 등 (전시품 키트 활용), 제1, 2차 대전 키트 활용	군사사 교육 군사제도 전술의 변화 유보트 체험	TV교육프로 그램: 중국혁명, 홍콩반환 그림그리기 대회, 중국근· 현대사, 백일장 대회 (북경사랑, 박물관사랑) 중국역사 퀴즈대회

또한, 戰死者 遺骸發掘과 관련된 문헌 기록물 발행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護國·報勳의식 양양을 위한 遺骸發掘事業의 내용을 초·중·고교 교과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國民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민간단체 주도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國外 및 北韓地域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30) 김용남, 「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모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pp. 18, 46.

國家報勳 차원에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해외독립운동(특히, 중국·러시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軍隊는 國家를 위해 존재하고 國家를 위해 싸운다. 國家가 나서서 이 사업을 대국민적이고 역사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全國民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愛國心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의 범위를 北韓地域까지 확장하는 것은 韓國社會 내부의 國家安保와 관련한 민군관계에 있어서 민군일체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 사업은 물론 北韓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있을 제반 南北會談의 의제 제안에서 韓國의 인도주의적인 평화지향성을 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6. 결 론

6·25戰爭 이후 大韓民國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 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채 이 산하 곳곳에 묻힌 戰死者들의 '배고픔, 외로움,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國民은 과연 얼마나 될까?

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중 美國의 경우는 국방부에 부차관보급의 책임자를 둔 '전쟁포로 및 실종자 담당처'가 설치돼 있고 그 아래 실무팀으로서 우리에게 '실하이(CILHI)'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미 육군 중앙신원 확인소가 있다. 지금까지 전장에서 실종된 美軍은 제2차 세계대전 때 7만 8,000명, 베트남 전쟁 때 1,800여 명 등에 이르고 있다. 美國은 'You are not forgotten(우리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을 슬로건으로 활동하면서 단 한 구의 유해라도 언제 어디서 사망했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찾아내고 있다.

오늘날 國家安保 및 報勳意識 提高를 위한 교육의 부재 속에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國家安保 및 國民 報勳意識 제고를 위한 教育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 事業의 意義는 크다. 그러므로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國家次元의 전후처리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國家를 위해 충성하다 희생된 사람을 國家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國家에 대한 신뢰와 조국애를 느끼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본 研究는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의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첫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政府次元의 報勳宣揚政策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예산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범국민적 안장행사로 전개하고, 유해발굴현장 공원화 및 기념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다양한 戰死者 報勳宣揚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을 國外 및 北韓地域까지 확대해야 한다.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책무이며 약속이다. 이름 모를 護國勇士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國民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향후 國內 戰死者 遺骸發掘 뿐만 아니라 國外 獨立運動家 및 北韓地域에 대한 遺骸發掘事業의 확대와 조속한 시행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발전을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09. 3. 13, 심사수정일 : 2009. 4. 30, 게재확정일 : 2009. 6. 11)

주제어 : 전사자 유해발굴, 국가보훈처, 선양정책, 6·25전쟁, 국립현충원, 유해발굴감식단, 전쟁기념관, 기념사업, 보상, 장례

<ABSTRACT>

A Study on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ds' Remains in the Enhancement Policies

Lee, Ki-oh

There is one clear measure to judge whether a country is a nation with dignity? how the nation and its people treat the war deads who sacrificed their lives to protect their citizens and preserve their nation. In this vein,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ds in the Korean War.

This is a significant milestone that will contribute to take Korea to a higher plane. However, there is a long way to go. We have already wasted too much time to the carelessness of previous administration.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ds began in 2000.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ds are getting systematized day by day. However, the project's success requires more tha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with all it's available energy, such as forming an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ND. We should always bear in mind that our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exit now without the sacrifices of those soldiers who passed away. Now it is the time to encourage people to show more concern and vigorously contribute to the cause.

This is present only a direction of enhancement policies in the projects of excavating and identifying the remains. After thi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exhuming and identifying the remains of war deads in the Korean War

but also to take part in the foreign and North Korea.

Key Words :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ds, The Patriots and Veterans Administration Agency, Enhancement Policies, the Korean War, National Cemetery, Agency for KIA Recovery, The War Memorial of Korea, Memorial, Compensation, Burial